第278回國會 (定期會) 南北關係發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8年12月3日(水)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업무현황 보고
   가. 통일부 소관
   나. 외교통상부 소관
   다. 국방부 소관

審査된案件

1. 업무현황 보고 ····· 2
   가. 통일부 소관
   나. 외교통상부 소관
   다. 국방부 소관

(10시12분 개의)

○委員長 李龍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기국회 제2차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막바지 단계에서 소속 상임위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아직 상견례를 하지 못한 위원님이 몇 분 계셔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회의 때는 외국출장으로 결석했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법사위가 동시에 또 개회되고 있어서 왔다갔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참고로 주성영 위원님은 한나라당 간사 위원님으로 지난번에 선임이 되셨습니다.

다음, 김광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한나라당 경북 안동시의 김광림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일해 온 경험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주로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마는 가끔은 자리를 비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계수조정소위 위원 아무나 안 시키는데 큰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범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한나라당 이천·여주 지역의 이범관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감사합니다.

송민순 위원님!

○송민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남북 관계가 이념적인 이런 것을 극복해서 초당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뜻을 모으는 데 동참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감사합니다.

또 인사 못 드린 분은 나중에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예고를 했던 대로 이달 1일부터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 측 인력을 대폭 축소토록 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북 간의 통행을 제한·차단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날로 경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북 양측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경색이 고착화되고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정부 보고이므로 정부의 각 관련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남북 관계 업무현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업무현황 보고

가. 통일부 소관

나. 외교통상부 소관

다. 국방부 소관

(10시16분)

○委員長 李龍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남북 관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외교통상부·국방부장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모두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는 3개 부처 장관님들께 일괄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외교행사 관계로 업무 보고를 하시고 11시 30분경에 이석을 좀 할 예정입니다. 대신에 신각수 제2차관이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하중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존경하는 이용삼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 김하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 관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 차원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축하 드리고, 오늘 또 질의를 통해서 많은 지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12월 1일부터 북한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의 남북 관계 상황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남북 관계 현황,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차단 동향, 향후대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 관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에 향후 앞으로 5년간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상생공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남북 관계를 검토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3월 말부터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무조건 이행, 또 '비핵·개방·3000'의 폐기 등을 요구하면서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당국자를 철수시키고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대남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같은 대남 강경조치와 비난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강경조치와 대남비난에 대해서 맞대응을 자제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남북 간 교류협력은 계속 발전이 됐습니다.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적 왕래가 15만 8000명으로서 10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1%가 증가했습니다. 남북 교역은 15억 6000만 불로서 전년 동기 대비 8%가 증가했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87개로서 전년 동기 대비 67%가 증가

했고, 현재 개성공단에 북한 근로자는 3만 500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87%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에 대해서 상주연락기구 설치를 제의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특히 6·15, 10·4 선언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대화도 거듭 제의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옥수수 5만t 지원 제의 등 조건 없는 식량 지원 입장도 계속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1일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피격이 돼서 사망한 사건으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강화되었지만 정부는 이 사건과 남북관계를 분리 대응해서 남북관계 악화를 방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0월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위협을 하기 시작했고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차단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통한 개성·금강산지역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10월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부터입니다. 군사회담에서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며, 개성·금강산지구 체류 인원들이 더 이상 헌지에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후에 북한은 '로동신문'이나 군사실무책임자 접촉, 남북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에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전통문을 통해서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차단을 실행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어서 11월 24일에는 군사전통문, 또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통지문 등을 통해서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을 중지하고, 문산-봉동 간 열차운행을 중지하며,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하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지원기관·입주기업 인원 등 50%를 축소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 11월 26일에는 금강산 체류인원 50%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11월 28일 현재 개성관광과 남북 간 열차운행이 중지되고, 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철수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개성공단에 관리위원회, 지원기관, 입주기업, 건설업체, 협력업체 등이 880명 한도 내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이후 금강산 관광지구는 100명 한도 내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출입·통행은 동해선이 매주 화요일에 출입경 각 1회씩, 경의선이 출입경 각 3회씩 해서 6회, 매회 인원 250명·차량 150대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적지 않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 11월 24일 통지문, 전통문 등에서 표면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부정 등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대북 전단 살포가 중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한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가 UN에서의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북한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경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의 정책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 이행방안을 협의할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민간단체들이 자제토록 적극 설득해 왔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강경정책을 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입장을 계속 왜곡하면서 일방적이고 강경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취한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 통행 제한·차단 조치가 1차적인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특성상 추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의 장래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번 제한 조치에서 일단 '특례로 보장'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11월 24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통지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11월 27일에는 통일부장관이 북측에 남북 당국자 간 현안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12월 1일에는 통일부 성명을 통해서 다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 스스로가 10·4 선언을 위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당국 간 회의를 제의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원칙을 견지하면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에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현안문제 해결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방안을 협의할 것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잘못된 주장이나 압박에는 의연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당분간 개성·금강산 지역의 방문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을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지역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방북교육을 강화하면서 질서 있는 교류를 추진할 것을 저희들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도 지원할 것입니다.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 탁아소 건설 등 필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나갈 경우에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강산관광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국론분열 및 남남갈등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서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충분한 대국민 설명 등을 통해서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현안과 정부의 대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통일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통일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이용삼 위원장님, 그리고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입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된 대북정책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기본입장, 현안 및 대책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의 최근 현황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6월 26일 북한 핵신고서 제출 이후 검증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간 미·북한 간 검증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10월 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 방문 시 북측과 검증 방안에 대해 서면 및 구두양해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10월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서 또 북한도 불능화 역행 조치를 중단하고 10월 14일부터는 5MW 원자로에 남아 있던 사용후 연료봉 등을 인출 재개하게 됐습니다. 또한 미·북 양측은 11월 6일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이 방미 계기에 검증의정서 관련 재협의를 가졌으며, 검증 관련 기존의 미·북 간 서면 및 구두양해 합의 사항을 재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1월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서 검증 관련 미·북 간 주요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6자회담 전망 및 주요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를 거쳐서 6자회

담 수석대표회의를 12월 8일 북경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6자회담에서는 미·북 검증 합의를 기초로 검증의정서를 채택해야 되며 북한의 불능화 역행으로 인해 지연된 2단계 불능화 작업과 경제·에너지 지원을 마무리하는 시간표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에너지 실무지원그룹 의장국으로서 불능화 진전에 상응하는 5자 간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가능하면 북핵 폐기 마지막 단계인 3단계 행동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신 행정부의 북핵 정책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당선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미·북한 간 직접 접촉의 필요성도 언급한 바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북핵 문제 및 미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북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전통적으로도 강조해 온 민주주의,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고려되는 가운데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 정부는 검증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이 6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및 해결되어 6자회담 과정이 진전되도록 미국을 포함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6자회담과 남북관계가 상호 추동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타 대북정책 관련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대북정책의 국제적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금번 제63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처음으로 51개 여타 공동제안국과 같이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하여 체류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판문점 남북 적십자 직통전화 단절, 그리고 이틀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성공단 관계자 등의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국제무대에서 남북이 대결하는 양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원칙을 견지하며 지속적으로 상생공영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 그리고 현안과 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외교통상부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대북정책에 대하여 확고하고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이러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안보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외교통상부의 노력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외교통상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방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방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남북관계와 관련한 국방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특위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면서 관련 국방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북 군사관계 현황 및 대비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전반적인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 및 이행현황, 남북관계 추이와 북한의 위협, 남북 군사관계 현 실태, 현 상황하에서 남북 군사관계 추진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부터 현재까지 남북 간에 이루어진 군사분야 합의사항과 이행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에 표시된 1번부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는 횡으로 주요 합의서, 합의사항, 북측의 이행 여부 순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우선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도 북측은 그동안 비방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금년 4월 이후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중상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지 1년 만에 93년 체코, 95년 폴란드 공산 측 중감위 국가들을 축출하였고, 94년에는 북측과 중국 군정위 대표를 철수시키는 등 정전체제 무실화를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무력 불사용·불침략 합의에도 불구하고 96년, 98년 잠수함 침투, 99년과 02년에 서해 NLL을 침범하여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2번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측은 전술핵을 91년 철수하고 비핵화 선언을 하였으나 북한은 정면 위반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추출 등 핵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06년에는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00년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개최된 제1차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데 합의했음에도 불과 2년 후에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4번입니다.

지난 04년에 개최된 2차 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해상 우발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합의하였는데 북측은 그들에게 불리한 선전수단 제거에만 관심을 보이고 우발 충돌방지를 위한 함정 간 표시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02년부터 07년까지 진행된 군사실무회담에서의 비무장지대 철도·도로 연결, 남북관리구역 내 통행 등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북측이 비교적 이행해 왔으나 금번 12·1 조치를 통해 육로통행을 제한하고 화물열차 운행을 차단하였습니다.

6번입니다.

지난해 10·4 합의이행을 위한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여러 합의가 나왔으나 북측의 거부로 당국 간 접촉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으며 특히 해상불가침 경계선, 해주 직항 허용 문제, 한강하구 공동이용,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 등은 NLL과 관련된 쌍방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협의 자체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작년 11월 개최된 7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3일 우리 측은 통신자재·장비 제공 협의를 제의하였으나 북측의 반응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측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지금까지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은 그들에게 유리한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합의사항만 선별적으로 이행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남북관계 추이와 북한 위협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볼 때 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제1차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성명, 그리고 지난해 2차 정상회담에서의 10·4 선언 등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북측의 대남 도발과 군사위협에 변화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 두 차례 핵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가 추출, 06년 10월 9일 핵실험은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을 와해시키는 심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으며, 98년과 06년 두 차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 90년대 말 노동미사일에 이어 지난해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작전 배치

시키는 등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신형 전차 개발 배치, 대규모 포병 화력과 특수전 병력 등 재래식 전력의 지속적인 증강, NLL에서의 두 차례 해전, 전투기 영공침범 등의 도발이 있었으며, 한미동맹 이간, 한미연합훈련 중지, 주한미군 철수 등 대남 공세를 끊임없이 지속해 왔습니다.

이처럼 북측의 군사위협에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남북 간에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남북 군사관계 현 실태입니다.

현재 남북당국 간에는 접촉과 대화가 단절되고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으나 군사당국 간에는 남북 간 통행의 군사적 지원과 군사회담 채널을 통한 협의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민간인의 방북과 복귀 등 남북 간 통행을 위해 군사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남북 간 공로통행과 해로통행을 위한 정부의 승인 절차 과정에서 국방부는 군사적 차원의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항공기 운항 간 공중감시 및 구조구난 대비, 민간선박의 NLL 통과 시 통신검색 및 운항 간 경계·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번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인원 및 물자의 육로통행을 위해 UNC 및 북측 군부와의 협의를 통한 MDL 통과 승인 절차의 수행, 남북관리구역 내 호송 및 경제제공 등을 통해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신망도와 출입절차 도표,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국 간 접촉·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군사회담 채널을 통해 남북 간 협의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2일 군사실무회담 개최와 10월 27일 군사실무책임자 접촉이 있었습니다. 북측과 우리 측의 주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어제까지 정상급 6회, 실무회담급 10회, 실무책임자급 30회 등 군사회담 대표 간 전화통지문이 송수신되고 있습니다. 양측 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남북 당국 간 접촉·대화의 단절 상황에서도 남과 북은 군사 채널을 통해 상호 최소한의 입장 교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하에서의 남북 군사관계 추진 및 대응입니다.

남북 군사관계 추진방향입니다.

북한 핵 위협은 최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무력충돌 방지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내에서 신뢰 구축, 운영적·구조적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평화체제 전환 시까지 현 정전협정을 유지·준수토록 하는 가운데 한미동맹, NLL 등 주요 안보사안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12·1 조치와 관련해서 북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하면서 사소한 이상활동 징후라도 포착 시 추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JSA, 남북관리구역, GOP 지역 우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며 해당 지휘관 책임하에 도발 유형별 대응훈련을 숙달하고 남북관리구역을 통한 민간인 철수 시 군 지원계획 시행 준비를 하며 CIQ 내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북해역 NLL 인근에서의 아 함선에 대한 공격 및 어선 납치 등에 대비해서 북측에게 도발 빌미를 줄 수 있는 아 함정 및 어선의 활동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이상징후 포착 시 대응준비를 철저히 하여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상·해상·공중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3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간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분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한나라당의 경기도 포천·연천 출신의 김영우 위원입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조치라든지 개성공단 우리 측 인력의 일부 철수를 요구하면서 지난 11월 24일 통지문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 10·4 선언을 부정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추구해 온 남쪽 당국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영우 위원 이와 같은 남북 경색의 주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북한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위원 최근 북한은 10월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대북 전단 살포가 폐쇄된 북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개방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우리 국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으로서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그 대북 전단 살포가 남남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기본가치들은 어느 정도 쟁취해야 되는 가치라고 봅니다. 어느 한 사회가 저절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구상에 없었다……

우리 과거의 민주화 투쟁을 본다고 하더라도, 민주화 과정을 생각할 때 그런 군사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과정을 통해서 쟁취했던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남한의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 것을 물리력으로 정부가 막아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심각한 것이 저는 남남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강기갑 민노당 대표를 만나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왔고 의도적으로 파탄을 낸 적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우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남남갈등 방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강기갑 대표한테 얘기하시고 그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얼마큼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우 위원 최근 개성공단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을 때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상책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통일부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만일이라도 사실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싶지가 않은데, 만일 진짜로 그런 상황이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또 그와 같은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국방부장관께 질의하는 겁니다. 제3·제4의 연평해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 부분 경색된 국면으로 흘러가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최근 남북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경계태세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지, 아니면 제3·제4의 연평해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군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도 그러한 발생 가능한 상황 중의 하나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 이번에는 다시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조치들이 어떻게 취해지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금강산 사건이 났을 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분리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기회로 삼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상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우 위원 그리고 다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문제인데, 보도에 따르면 보수단체 한 30여 개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에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생각입니까? 물리력으로 막겠습니까? 아니면……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남남갈등으로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고 각 해당 단체들이 좀 이성적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현장에 경찰 한 500명이 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영우 위원 경찰이 거기에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보수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것 자체를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하지요, 물론?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우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통일부장관께서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니,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다 안 쓰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안보관계 장관 세 분이 같이 자리해서 이렇게 남북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선 세 분 장관께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보와 경제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민순 위원 경제가 튼튼하고 해야 국방능력도…… 국방부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국방능력도 향상되고 또 국가 안보환경이 개선되어야 경제능력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다른 나라하고 달리 한국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래서 항상 안보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라든지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최근에 더 더욱이 우리에게 절실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남북관계라도 좋아야지 이게 우리 경제에 선순환적인 좋은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사실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지표로서 작용을 해 왔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또 앞으로 통일을 향한 이런 과정에서 긍정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다 예외 없이 동의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북관계 전반뿐만 아니라 그 상징이 되는 개성공단에 대한 상황 악화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상황 악화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황 악화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게 마치 무거운 짐을 나르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낙타가 처음에 짐을 많이 실었을 때 허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싣고 가고 있는데 나중에 누가 지푸라기를 하나 더 얹으면 그 무게 때문에 내려앉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 사정이거든요. 개성공단이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북한이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의도에서 이것을 공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김하중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 아니고 북한이 이제까지 우리하고 합의했던 그런 사항들을 어기고 계속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송민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북한이 나쁘다, 북한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이 자리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정부는 누가 나쁘다 좋다 동기가 옳았다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부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 분 장관님 전부 다 지난 수십 년 동안, 30년 동안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 죽 일을 해 오신 분들인데 정부는 선과 악이라든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첫째, 안보 관련 장관들은 자기가 국방부장관이다 통일부장관이다 외교장관이다 이것보다도 각료로서 안보와 경제, 국가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자세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삐라 문제 같은 것만 해도 지금 삐라에 들어 있는 내용이 다분히 상대방이 아프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측면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송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삐라를 뿌리고 이러는 것이 북한을 생각해서 뿌리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지요. 더 큰 국가적 목표를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국가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안보와 경제 전체를 생각하는 우선순위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자기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아마 쿠바에서 미국으로 온 난민들이 삐라 뿌린 이런 것과 유사한 형태인데 미국과 쿠바가 보는 그런 관계와 한국에서 남과 북이 보는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찰을 해서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이라는 것을 바꾸는 방법을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바꾸느냐, 지금 말한 대로 삐라 같은 것을 통해서 바꾸느냐, 방법은 정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어려운 시점에 있어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는 선택을 해야지 지금 내가 옷을 입고 물을 건널 텐데 옷은 적시지 않겠다 이러한…… 지금 세 장관님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지금 옷 입고 강을 건널 텐데 옷은 적시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삐라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냥 단순히 설득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강도 있게 설득을 하는지, 그냥 설득하는 모양만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부장관만 나서서 설득을 할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안보관계 세 분 장관이 같이 자기 소관 분야하고 관계 없이 국가 안보와 통일, 경제 이런 것 다 생각해서 같이 나서서 한번 설득을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세 분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통일부장관만 나서서 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안보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 또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위협을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데 대한 공통 목표는 우리 함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남북관계에 단절이 있더라도 군사관계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접촉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하면 전체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국방이건 외교건 통일이건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민순 위원 지금 그런 식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북한이 내부적인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얻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민주화가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폐쇄된 사회였더라면 상

황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어떤 한 국가가 민주화되고 개방되고 하는 것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질 때 그것이 빨리 오는 것입니다. 다 세 장관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잘 판단을 해서 하시고요, 지금 보고를 하신 세 분들이 다 상황이 되는데 제가 우선 하나 외교부장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유엔 인권결의 때 10·4 합의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하고 한국이 상당히 공동 제안국으로 나서면서 그것을 빼는 데 작용을 했다는 국제사회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10·4 합의는 10·4 합의대로 하고 인권은 인권대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굳이 그것을 그렇게 빼면서, 북한이 그거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모순된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권의 원칙은 당연히,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권 거기에 우리가 공동 제안국으로 하는 것과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은 버스 운전사하고 버스 승객하고의 차이만큼 다른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한다, 왜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서로 다른 이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그런 것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님 그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우리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번 협의를 거쳤고 또 우리가 문안 협의에는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개 인권 문제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송민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도 인권결의안에 10·4 합의를 굳이 왜 뺐는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굳이 뺀 것은 제가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작용을 한 것인지, 문안 합의에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거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李龍三 마무리 발언을 좀 하세요.

○송민순 위원 지금 말씀이지요, 외교부에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앞장을 서서 그것을 뺐다는 데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통일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대화를 하겠다는 것과 외교부가 실제 국제사회에서 지난번 ARF에서부터 이번 유엔 인권결의안까지 한 이 두 개의 모순을 소명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10·4 선언이라든가 6·15 선언을, 우리 남북한의 선언을 국제무대에 가지고 가서 이러쿵저러쿵 지지를 하고 반대하는 그런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ARF는 분명히 그렇게 했고 유엔 인권결의안의 경우에도 EU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10·4 선언을 ARF에서 넣으려고 그런 것은 북한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개입하고 말고 하는 포지션을 취한 적은 없습니다.

○송민순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예, 나중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대전 대덕구 출신 자유선진당의 김창수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는데요, 앞서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대북 전단 문제, ‘삐라’라고도 그러는데 삐라라는 것은 영어 ‘bill’을 일본말로 한 게 삐라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김창수 위원 삐라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단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통일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그 삐라 내용은 보셨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다 보았습니다.

○김창수 위원 거기에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생활, 여자관계, 또 건강 관련 내용 이런 게 들어 있고 또 거기에는 돈, 미국의 1달러나 중국의 10위안 그런 돈도 들어있어요. 그것을 대량으로 살포하는 그 행위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일단은 그런 것을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내용 중에 그런 것이 북한을 자극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까 봐 저희가 그래서 자제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컨대 김하중 통일부장관님의 여자관계나 사생활이나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이 전단으로 만들어서 뿌린다 했을 때 그것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시켜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

○김창수 위원 아니,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또 경색을 악화시킨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리고 현행 실정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이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니까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저희 유관 부서에서 법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통제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김창수 위원 저는 우리 자유선진당의 전반적인 당론하고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19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후에 개성공단을 설치하고 또 경의선, 동해에도 철도가 놓여지고 이래서 통행·통상·통신 3통의 자유 이런 것까지도 많이 진전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남북대화의 채널이 단절되고 또 개성공단이 완전 철수는 아닙니다만 상주인원이라든지 기업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그래서 남북관계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남북의 관계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전단 살포 같은 그런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좀 슬기롭게 풀어가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해방 후에 진전되어 온 그런 남북관계의 시계바늘을 오히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사태는 빚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서, 남북관계를 생각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단체들이 정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점점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걱정하시고 또 이 단체들이 자제해 줄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 실정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이런 것을 개정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거나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유관 부서에서 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가 외통위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협의했는데 많은 분들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이런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교류협력법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의들을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개성공단 문제를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이 몇 개 업체가 되고 노동자 수는 어떻게 되지요, 입주 노동자를 포함해서?

○통일부장관 김하중 현재 우리 기업 88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3만 5000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지금 창업 준비 중인 그런 업체가 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게 한 45개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내년 초로 가면 한 130여 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앞으로 또 북한이 완전 폐쇄 조치까지 취하게 되면 그동안에 투자한 이런 것이 도루묵

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취업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남측의 협력 업체들도 모두 일손을 놓게 되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기본적으로는 우선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88개 업체 중에서 69개 업체가 저희 경제협력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 보험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릴 수가 있고 또 현재 많은 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쓰고 계신데 그 상환기간을 좀 연장해 드린다든지 또 저희가 그 분들의 어떤 판매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저께 밤에도 제가 기업체 한 20여 분들을 만나 가지고 저희 통일부에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69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상받을 금액이 한 2000~2500억 정도로 추산이 되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서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투입될 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기본적으로 한 3000억에다가 여유자금이 한 2500여 억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은 한 5000억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 입주 기업이라든지 개성공단의 향후 지원 방안, 이런 데 대해서는 정부 측이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랜드연구소의 베넷 박사가 와 가지고 강연을 했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김창수 위원 거기에 북한이 일거에 붕괴할 경우에 중국이 대거 군대를 투입해서 주둔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관하여는 베넷 박사도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김창수 위원 물론……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저희는 북한의 어떤 급변사태 또는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마무리하세요.

○김창수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 2020 그런 계획에 따르면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든지 기계화부대 창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병력을 한 3분의 1로 감축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아까 베넷 박사의 얘기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반도 상황이 변화하고 또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경우에 그에 대비한 우리의 어떤 군 대응 계획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러한 대응 계획에 관하여는, 그것은 군사 계획에 관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이 군 구조를 개선하고 또 전력을 첨단화, 기술화하면서 질적인 수준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또 각종 작전 상황하에서 그것이 저지대이든 산악지대이든 즉응성을 갖는, 기동성을 갖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고맙습니다.

외통부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크리스토퍼 힐 차관과 북미 간의 합의 사항에 서면 합의, 구두 합의해 가지고 논쟁이 좀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이범관 위원 그중에 문제되는 구두 합의 사항 문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시료 채취 문제와 무슨 미신고시설 방문 문제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니까요, 아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언론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그럴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게 용어가 과학적인 절차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범관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시료 채취라고 이해하는 그런 걸로 하는 겁니다.

○이범관 위원 그다음에 6자 회담이 곧 있을 예정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이범관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미 정부도 지금 정부가 바뀌게 되어 있고, 소위 레임덕 기간에 6자 회담이 열려서 무슨 실효가 있느냐, 그런 전망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6자 회담이 열리면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남은 과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검증 절차에 대한 합의를 6자 간에 확인하는 것, 두 번째로 2단계 불능화 조치라는 것이 영변의 핵시설을 모두 불능화 하는 건데 그것하고 우리가 100만t에 상당하는 중유하고 물자 지원 스케줄을 다시 잡아가지고 일단 2단계까지는 마치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범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현재 바뀌는 입장에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데 오바마 신행정부도 6자 회담 과정을 지지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단계까지 일단 종료를 좀 시켜 놔야 새 정부……

○이범관 위원 글쎄, 그 전망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회담에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저……

○이범관 위원 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내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하고 김계관 간에 조정이 있기 때문에 좀 사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다음에 새 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 여러 가지 대북정책이 조금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북미 직접 접촉이 있게 되면 언제쯤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직접 접촉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 회담 테두리 내에서……

○이범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망을 한다면 금년 6월경이라든지 하반기냐, 상반기냐 이런 식의 전망을 좀 해 보실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현재는 아직 외교안보팀이 확실히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힐러리 국무장관만 지명이 됐고 해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시간을 점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범관 위원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6자 회담은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범관 위원 북미 직접 접촉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북미 직접 접촉은 지금도 하고 있고……

○이범관 위원 예를 들면 방북을 얘기하는 거지요, 방북. 힐러리 국무장관이 임명이 됐으니까 힐러리 장관이 방북을 한다든가 예전처럼 그런……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범관 위원 상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여하튼 저로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치 않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힐러리 장관이 방북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지요.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이범관 위원 정리되기 전에는 그런 관계가 어렵지 않느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핵, 미사일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범관 위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이범관 위원 남북 관계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남북 간의 대화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지금 6자 회담에서 핵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북미 관계, 북·중 관계, 하여간 다변적 차원에서 남북 관계는 해결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문제에서 우리만의 무슨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이범관 위원 그것 참 답답한 일이지요. 저도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보는데 특별한 해법을 가진 분이 없어요. 비판은 합니다. '왜 이렇게 경색되게 만들었느냐', 그것 다 옳은 얘기지요, 지금. 어떤 차원에서 견해의 차이는 있어도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그 상황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그러면 과거 정부처럼 지나온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대로 이행해 주는 것이 남북 관계 해결하는 방법이냐, 그 당시에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방식의 남북 관계를 정립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지금 누구도 정확한 해답을 못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북한입니다. 이러한 남측 내부의 이런 정립되지 않은 분열된 의견 상황을 남남갈등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을 오히려 북한이 활용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남북 관계는 다변적 차원의 관계도 있지만 남측의 의견 조정과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존경하는 이범관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외통위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정책들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대북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중시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상당히 양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남북 관계를 질적인 변화로 바꾸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원칙을 견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북한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잘 움직여 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보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래 왔듯이 한 번은 거쳐야 할 조정기고 그 조정기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겠지만 저희가 참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범관 위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우리가 강경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과거의 남북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6·15 정상회담 하고 나서도 서해 연평해전 일어난 것 기억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아까 국방부장관이 다 보고드렸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남북 관계가 풀린 것 같은데, 정상회담까지 하고 났는데 연평교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 경색됐으면 남측 책임입니까, 전부 다? 이런 과거의 예를 우리가 좀 되새겨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에서 남북 관계, 아까 국방부장관도 죽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 관계 합의 사항 불이행이 많지요, 북측 불이행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북측에 항의하거나 추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들이……

○이범관 위원 뭐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방 분야에 관하여서는 지금 원천적으로 이해가 같지 않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쌍방의 입장이 첨예하여 대립되는 사항, 이런 것은 논의를 하기는 했으나……

○이범관 위원 북측 태도는 뭡니까? 왜 이행을 안 한다는……

○국방부장관 이상희 금방 결렬이 되는 사항들인데 예를 들면 NLL 문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범관 위원 예.

○국방부장관 이상희 NLL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은 아주 첨예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측은 NLL을 자기가 구획한, 예를 들어서 해상경계선으로 하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만나도 해결되기 아주 어려운 과제이고 이런 것은 북측이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앞으로 NLL에 대한 북측의 무력화 현상이 또 있을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 이상희 가능성이 있는 정책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것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원칙대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범관 위원 예?

○국방부장관 이상희 원칙대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범관 위원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해……

○국방부장관 이상희 현재의 해상경계선으로 보고 북한이……

○이범관 위원 다음에,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도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미사일에 대한 가능성은,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군사적 대응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위협이 증가되었을 때 그것을 남북 관계 또는 국제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해 나가야 할 사항이고, 만일 미사일을 적이 전력화하여 그것을 작전 배치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범관 위원 마무리……

○委員長 李龍三 마무리하십시오.

○이범관 위원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통일부 입장에서도 남북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 북측에 항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범관 위원 남북 협의 북측의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 김하중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정부 출범 이후에 공식적인 접촉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얘기는 못 했지만 최근 들어서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몇 번 저희가 발표도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앞으로 힐러리 국무장관이 들어서고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 클린턴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이 답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는 게 많이 전망되는데 외통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제2차관입니다.

저희가 아직 오바마 신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오바마 신행정부의 구성원이 되리라고 예측되는 사람들하고 접촉해 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인 기조에 큰 변함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범관 위원 만약에 과거 클린턴 정부 정책이 저거 되면 경수로 제공 문제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 그 당시에는 동결 대 보상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핵 문제를 북한에서 협조적으로 나오면 보상 원칙에 따라서 경수로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경수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경수로 제공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문제를 저희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범관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참아야 한다, 또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는 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는 게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이나 제가 이것을 지적했는데요.

개성공단이 지금 문을 닫게 된 것은 남측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참아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답보다는 '개성공단은 확실히 북쪽에서 볼 때 처음 생각과 달리 체제 위협에 상당한 요인이 있고 돈이 안 된다, 이 핵심적인 요인 때문에 문을 닫는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하고 설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전략적 모호성, 참아야 한다가 아니라.

개성관광 먼저 묻겠습니다.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으로 말미암아 북한으로 간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개성관광은 지금까지 한 2000만 불……

○송영선 위원 다 합쳐서……

○통일부장관 김하중 2000만 불 정도 되고 개성공단은 600만 불 정도 갔습니다.

○송영선 위원 지금 개성공단, 개성관광 다 합쳐서 간 돈이 달러 수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 약 900억 정도 됩니다.

금강산관광은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6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한 1380 원 정도, 1400원으로 계상해서. 몇 분의 1입니까? 7분의 1 내지 8분의 1, 9분의 1까지 되는데 이때까지 개성공단이 유지되어 왔던 이유는 나름대로 주민 통제가 가능했다는 것, 둘째로는 우리가 임금을 한 57~60불 주면 갔다가 다시 한 10분의 1만 개성공단 입주자들한테 돌아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됐습니다.

또 개성공단에서…… 이때까지 개성공단은 궁정경제가, 김정일이가 직접 대남 부서에서 관장을 하다가 아주 최근에 들어서, 쓰러지기 전입니다마는 올 들어서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내각산하로 갔습니다. 인민경제로 넘어감으로써 거기 관장하던, 실제로 평양에서 온 국가보위부들이 지금 불만을 엄청나게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김정일에게 사실 부담이 된 겁니다.

그러나 김정일 자신으로서도 개성공단 닫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80년대 조총련이 북한에 들어가서 사업을 여러 개 시도를 했지만 성공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으로서는 자기 입으로 6·15 정신과 10·4 선언에 가장 부합된 사업이라고 치켜올려 놓아 놓고 개성 닫으면 중국 러시아 일본,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아주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장애물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닫으면 2005년 9·19 선언에서 포함된 케도(KEDO)사업이나 에너지 지원사업 끌어오는 데 앞으로 자기 스스로의 길을 막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개성공단을 닫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산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게 돈벌이가 안 됩니다.

둘째로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무자 전부다가 '2일 생활총화'라는 걸 한다는 것 아시지요? 이틀에 한 번씩 '남측 사람들을 접근을 해 보니 어떻더냐?' 이 비판하는 세력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주민통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체제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개성공단에 배치되는 인력이라는 게 아무나 불러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보위부 수준의 어떤, 소위 말하는 철저한 이념이 갖춰져 있는 사람인데 그 인력, 북한 스스로 그 인력 조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금강산에 비해서 돈이 안 되니까…… 11월 24일 김윤규 전 사장한테 보낸 걸 보십시오. 그리고 또 현대아산에 보낸 걸 보십시오. 아직도 금강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현대아산 측은 당국의 부당한 입장에 동조 말라.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도록 하자" 목표는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자는 겁니다. 돈벌이 7배, 8배 되는 데를 빨리 하든지, 안 하려면 관두자.

그래서 금강산 사업 재개될 때까지 개성공단을 볼모로 잡겠다라는 게 김정일의 생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답해 주세요.

현금 지원하는 사업 재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무슨 말씀하시는……

○송영선 위원 현금 지원하는 사업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개성공단 같은 것은 임금으로 현금을 주는 거고 그것은 일종의 기업인들이……

○송영선 위원 기업이기는 하지만 개성관광도 있고 또 금강산 사업도 있으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현금 지원 사업이 과거 10년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현금 지원이 우리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현금 지원은 죽어도 못 하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확실한 라인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니, 그것은 전략적인 모호성이 아니고요, 개성관광이나 금강산관광은 여건이 허락하면 당연히 다시 재개를 해서……

○송영선 위원 현금 지원이……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것은 뭐 기업……

○송영선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왜 자꾸……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니, 기업인들이 현금으로 주는 거야 저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송영선 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 제가 기업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따로 묻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금 지원이 우리의 처음 의도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생각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갔기 때문에 현금 지원해 주는 것이 북한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을 다 죽이는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은 정말 야멸차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는 식량 지원이나 비료를 주거나 의료 지원을 하거나 생필품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식량 지원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왜? 2008년 1월 1일 노동신문을 보면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정일이가 올해 우리 북측 인민에게 가장 힘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식량 문제다. 그러나 그 다음 줄이 뭡니까? 남측에게 절대로 손 벌리지 않겠다. 이 무슨 얘기예요? 배고파 죽겠으니 식량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지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그때 우리는 식량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미국이 5만t 쌀 갖다 주니 5만t 옥수수 갖다 주는데 받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또한 비료도 안 주었습니다. 우리 비료가 북한 비료에 비해서 ha당 생산량이 약 2.2배가 넘습니다.

이것 안 주니까 중국 비료 가져오려고 광물자원을 그냥 완전히 쓰레기 값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중국 비료 가져오려고. 이런 것에서부터 벌써 북쪽에서는 엄청난, 마음이 비틀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식량과 비료 지원 몇 개월째 묻고 있는데 '올해 내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좀 아직도……

○송영선 위원 지금은 또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때를 놓친 것입니다. 지금은 주면 화난 사람 자존심 더 상하게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꾸 내년 보릿고개를 기다려서 깜짝쇼를 하자, 그것 필요 없습니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개성공단 폐쇄 시 입주기업에 대한 대책문제는 제가 9월부터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통일부는 5000억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는데 이것 안 됩니다. 들어가 있는 88개 기업은 손해배상액이 1조 7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이 문제 수없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놔라, 만들어 놔라 했는데 아까 말씀이 '어제도 기업체들을 만났는데', 어제 기업체 만나 가지고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북쪽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오고 우리 정부가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데는 현금 안 주겠다고 생각했으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즉각적인 북쪽에서의 반응이 오는 데라고 알아야 됩니다.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보험금 2000억 이걸 가지고, 보험 대신 넣어주는 것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놨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한, 우리 자체 내 기업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남측 기업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뿐만 아니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에 질의하겠습니다.

10월 이후에 제주해협 통항하는 북한 선박 임검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감시는……

○송영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감시는 했으나……

○송영선 위원 임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임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니요? 이것 임검 어떻게 합니까? 통일부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부하고 협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임검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송영선 위원 남북해운합의서 내용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우리……

○委員長 李龍三 마무리 발언 시간 주세요.

○송영선 위원 남북해운합의서 내용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송영선 위원 뭡니까? 그 8조의 내용이 뭡니까?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을 때는 우리와 임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8월 이후에 원산에서 제주 아니면 청진에서 제주까지 왔다갔다하는 배가 올해 8월까지 460회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임검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이 일을 조사를 한 결과 빈 공선으로 왔다갔다한 배에 소위 말하는 미사일과 핵 개발 관련된 자재를 갖다 날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우가 30여 차례 넘었습니다. 한 번도 임검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게 당하고도 지금 국방부는 보고하는 데 보니 철저한 유사시에 대한 대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해협 그냥 지나가게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이것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예.

○국방부장관 이상희 충분한 첩보와 정보가 있다면 그것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선 위원 충분한 첩보, 통일부에 내는 선적 내용서를 보면 뭐를 싣는지 일일이 나와 있습니다. 첩보 필요 없습니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가 송영선 위원님 질의에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龍三 예, 답변하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식량 지원은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 지원은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께서 식량을 조건 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준비하고 지난 5월에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직접 나가서 옥수수 5만t을 제공하지만 옥수수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이 원하면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2번이나 우리의 제의를 일종의 묵살을 했습니다.

○송영선 위원 장관님, 1월에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래서 물론……

○송영선 위원 아무리 답을 하셔도 그것은 답이 안 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6월에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정부가, 아까 존경하는 이범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합의고 국민들의 지지입니다.

식량 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더 많으신 분들은, 식량을 줘서는 안 된다고 또 주장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몇 번을 식량 줄 기회를 봤지만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금강산사건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사실상 또 북한이 이렇게 우리한테 대해서 차단조치를 취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식량을 주는 문제를 저희가 하여튼 어쨌든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또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료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6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면회소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개성공단사업은 정말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셔서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말씀하신 사항을 다 참고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생각해서 또 대응을 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고 어떻게든지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계속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지원은 저희들로서는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이라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성과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통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한나라당의 경기 파주 출신의 황진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장관님, 여러 가지 남북관계 문제 때문에 특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11월 24일 드디어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12월 1일부로 개성관광을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인원까지도 최소한의 숫자로 줄이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지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북측에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이명박정부가 적대시 대북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가 없다, 두 번째 불만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가 핵심적인 불만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개성관광 중단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인원을 대폭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 제가 핵심적으로 꼬집은 세 가지 이유 맞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맞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여러 전문가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말이지요. 과거에 늘상 해 오던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분명하지만 과거의 벼랑끝 전술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다른 점은 예를 들면 북한이 체제 보강을 하는데 상당히 급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을 통해서 남북경협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개성관광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고급 간부들까지도 회의를 갖고 이런 우려가 굉장히 심해져서 이런 기회를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통일부장관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黃震夏 委員 또 한 가지는 김정일 건강 이상설과 연관시켜서 존엄을 건드리지 말라, 대북 삐라에 김일성 가계도까지 전부 나오면서, 건강 이상설까지 그렇게 가니까, 이런 것을 차단시키고 또 그런 것을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런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黃震夏 委員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동의하시거나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통일부는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黃震夏 委員 단순히 오바마정부가 도울 것을 기대한다든지 또 아니면 단순히 정권교체기에 남한 길들이기든지 주도권 잡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데 추가해서 이런 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돈벌이가 얼마만큼 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어떻게 생각하고 개성관광 어떻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금강산관광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것 중지시키겠나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도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도.

개성공단도 완전 폐쇄시키고 그다음에 또 취할 수 있는 다른 북한의 조치를 예상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아 있는 그런 강경조치 중에서?

○통일부장관 김하중 더 많은 인원을 개성공단에서 내보내는 것 그다음에 정부하고 관련된 기관들을 또 내보낸다든지 그런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가서는 폐쇄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기업인들을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또 정부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

한 그런 대비책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정황들을 전부 다 종합해 봤을 때 희망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그다음에, 점진적으로가 됐든 어쨌든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택할 수 있다라면 군사적인 도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최종적으로 폐쇄시키는 것보다는 그 중간에 군사 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사 도발 가능성이 더 높다, 우선은.

그래서 국방장관 입장에서 아까 여러 가지 답변하셨지만 군사 도발은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서해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쪽에서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상정해야 되는데 군사 도발이 그런 측면에서 있다라고 하면 어떤 군사 도발이 예상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대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남북관리구역 일대나 JSA 일대 또 NLL, 기타 다른 GOP 또 과거의 예로 봤을 때 공중에서의 침범 행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더 과거로 돌아가서 각종 침투나 이런 활동 또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의 발사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도발을 저희들이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지금 국방장관께서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거를 해 주셨습니다. 국방 당국에서는 이런 때일수록 어떠한 군사 도발도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한테, 외교부차관 계신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오바마 신 정부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바마정부가 직접 대화도 하겠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번 클린턴정부 시절에 국무부장관도 북한을 방문하고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북한 방문하는 것까지 있었고 맨 나중에는 클린턴 대통령도 방문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정권이 교체되니까 못했었거든요.

이런 등등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 부시정부하고는 전혀 틀려진다, 북한하고 훨씬 대화 위주로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훨씬 터프(tough)하고 다이렉트(direct)하다. 그다음에 그리고 프라브럼 솔빙 다이어로그(problem solving dialogue) 하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지금 저희가 북한의 생각을,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는 데 따라서 또 오바마 당선자가 그동안 밝혀온 정책에 비추어 볼 때 과거 부시 행정부와는 좀 다른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호하고도 직접적인 그러면서 문제 해결 위주의 대북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의 일반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래서 제가 정부당국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는 중에서 남남갈등, 국론분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 오히려 우리 남한에서 스스로 의견이 갈리고 심지어 갈등이 생기고 삐라, 어제 대북전단 살포하는 데에서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막 충돌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외교 당국에서는 어떤 채널로 오든지 오바마 정부가 등장하면 대북정책이 분명하게 어떻다라는 메시지를 오바마 정부에도 전달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도 계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나온 얘기들을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라든지 오바마 측근 인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마무리할 시간을 주세요.

○黃震夏 委員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북한에도 알려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미국 쪽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기조하에서 대북정책을 풀어나가도록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

다.

○黃震夏 委員 그리고 통일부장관께 끝으로 한 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들은 계속 말씀을 드려 왔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비난이나 강경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남갈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민주당 박선숙입니다.

국방부장관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남북 군사관계 추진방향 첫 번째가 북한 핵 위협의 최우선적 제거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남북 군사관계를 이런 방향에서…… 북한 핵 위협의 최우선 제거를 위해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북한 핵 위협 제거는 만일 북한이 핵을 전력화시킨다면 또 지금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거하는 것은 어떤 외교적, 기타 총체적인 국가 노력 속에 국방부도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박선숙 위원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게 좀…… 핵 위협의 최우선 제거는 외교·통일 쪽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 되는 것이 맞을지 모르나 국방부에서의 정책 방향이나 정책 수단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비핵화의 문제라거나 핵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앞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고 또 답변하시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긴장을 완화시키고 충돌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국방부에서의 방안과 정책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국방부에서의 방안은,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군사적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연평해전이 2차례 발발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은 남북한 관계가 분명히 진행되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그러한 우발적인 또는 계획적인 적의 도발에 대해서 명확히 대처할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숙 위원 국방부가 국무위원의 한 분으로서 통일부, 외교부와 함께…… 대통령과 여기에 계시는 세 분 장관들께서 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극단적인 충돌의 가능성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물론입니다.

○박선숙 위원 물론 국방부에서의 대비는 국방부 본연의 임무로서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앞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려되는 점들은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대응해야지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극단적으로 더 확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국방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도발이든 전쟁이든 예방이 가장 상책입니다. 만일 그러한 과정에서 도발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군사적인 대비를 하여 더 이상 그것이 확전되지 않고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차관이 계십니다만 상반기 내에는 북미 직접 접촉, 아마 질의하신 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면서도 특사파견이나 상당한 고위급회담을 염두에 두고 질의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차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제가 당시 자세한 문맥을 모르기 때문에……

○박선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상반기 중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신다고.

아니, 그럼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차관께서도 북미 간 직접적인 고위급의 접촉이 상반기에 없을 것이라고 보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고위급 접촉을 어

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박선숙 위원 직접 접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아니, 직접 접촉도 여러 가지 단계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신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박선숙 위원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다른 질의 드릴게요.

한미 정상회담 언제쯤 열리지요, 새정부하고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압니다.

○박선숙 위원 지금까지 검토 안 하셨어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아니요, 그것은 상대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밝힐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한미 정상회담이 내년 중에는 열리겠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럴 겁니다.

○박선숙 위원 중국이 우리 '비핵·개방·3000'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까?

한중 관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전략적 관계로 발전했다고 여러 번 정부에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중국이 '비핵·개방·3000' 동의합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비핵·개방·3000'이라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이 동의하고 지지합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

○박선숙 위원 안 합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운 일 아니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동의한다, 안 한다 이렇게……

○박선숙 위원 '비핵·개방·3000'이라는 정책의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비핵·개방·300'0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중국이 의견을 밝힌 것은 저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동의를 받지는 못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동의를 받을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선숙 위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전략적 관계로 발전하면서 동의와 이해를 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동의와 이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회에 다시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오.

통일부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비핵·개방·3000'이 이게 북한 당국이 표방해야 될 정책 아닙니까? 비핵화하고 개방하여 국민소득 3000불을 이루겠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만 해 주면 아주 저희는 좋은 일이지요.

○박선숙 위원 그러니까 북한이 표방해야 될 정책을 남한이 들고나가면 그것은 일종의 주권 침해 내지는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쁜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해서 한 겁니다.

○박선숙 위원 좋은 뜻이면 좋게 표현해서 상대방이 알아듣게 말하는 게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기다리자는 언제까지 기다리자는 것이지요, 남북 관계에서?

○통일부장관 김하중 언제든지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 대화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선숙 위원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 식량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세계식량기구가 저희한테 12월에 자기네들의 자체평가를 알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선숙 위원 나오면 보내실 건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나오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한의 식량 사정도 고려해서…… 하여튼 저희가 WFP로부터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가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 진작에 세계식량기구가 제안했을 때에도 거절하시고 시간을 끌면서 기회를 놓치셨어요.

제 걱정은 기다리다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류의…… 상황관리를 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가져올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혹시라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 보세요. 개성공단의 사업이 중단되어 보세요. 장관님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아니면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 정부부처의 장관님들과 정부부처 대통령께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상황,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북한 때문에 그랬다라고 핑계 댈 수 없이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고스란히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박선숙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9월에 대통령께서 개성에 기숙사 지어 주면 노사갈등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통일부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대통령님 말씀은 이 자리에서, 제가 외통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잘못 와전이 많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본인이 옛날에 현대에서 CEO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기 때문에……

100명, 200명 되는 기숙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어 주는 기숙사가 1만 5000명이나 되는 기숙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좀 엉뚱하게 보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 상황이 악화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입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국민들이 고통과 걱정에 빠져 있는 이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남북 관계의 악화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등급이 저하되면 그건 바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돌아옵니다. 총체적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결심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龍三 예, 마무리하시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정부는 갈 때까지 가겠다는 그런 건 절대로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공세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받아 주지 않으니까 북한이 화가 나서 저렇게 우리한테 대해서 결국은 정책, 지원을 요구하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한의 상황이 자꾸 악화되어 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경제에도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절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어저께도 어느 국제학술회의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북한이 나와서 양측의 입장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갔으면 저는 이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유념을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 또는 적대시 정책을 개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실행 과정에서 자꾸 이명박 정부에게 강경책을 쓰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비전을 과연 정부 내의 각료들이나 실무진들이 제대로 알고 실행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당은 야당대로 정부가 강경책을 편다고 비판을 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왜 정부가 맥도 못 추고 저렇게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무능함을 보이느냐,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유연성인데 원칙을 지켜야 될 부분에서는 원칙을 제대로 못 지키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에서는 뜬금없는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정책을 개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외통부차관께 질의합니다.

지난번의 인권결의에서 제안국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주요 결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대북 인권결의는 금년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수년간 유엔총회하고 인권이사회에 상정되었던 결의안이고요.

주된 내용은 북한 인권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바로 그겁니다.

수년간 결의된 내용에서 지난 정권까지 외교부는 어떠한 입장을 보였었습니까? 계속 기권해 오지 않았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이천……

○鄭玉任 委員 06년만 제외하고는 기권했습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사실은 그동안에 찬성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까지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기권을 하다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인권 문제와 같은 보편적 원칙에 대해서는 원칙을 견지하겠다 입니다.

그러면 그냥 찬성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제안국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인권결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국별 인권결의 가운데에서 미얀마라든지 이런 결의안에도 저희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고요. 이번에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51개국입니다. 공동 제안국이 상당수 있고, 전체적으로 인권이라는 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鄭玉任 委員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결의에 찬성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안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에서 지난 정권까지는 기권을 하다가 새삼스럽게 이번에 찬성까지 하고, 전략적으로 유연성을 보여도 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안국으로 들어감으로써 야당으로부터는 상당히 강경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실질적으로 북한에게는 모든 남북협력에 대해서 거부하는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솔직히 외교부 입장에서 좀 낯 뜨겁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권까지는 이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권을 하고, 이번에는 또 제안국으로 나온다는 것이 좀 낯 뜨겁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전략적으로……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저희 새 정부가 들어서서 말입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 유연성을 보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는 정부의 실무진이나 정부 각료들의 책임이 크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아니, 그것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저희가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게 된 것은 새 정부 들어서 인권 문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제안국에 저희가 참여하기로 정부 간에 내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겁니다.

○鄭玉任 委員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권에서는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인권결의에 대해서 기권하자고 하더라도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라면 이것은 보편적 원칙에 입각해서 찬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았고, 지금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권 정책을 바꾸었다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권 정책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결의에 대해서 제안국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계를 두는 유연성은 보이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왜? 지금 우리가 인권결의안의 제안국으로 들어간다 해서 북한 인권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통일부장관께 질의 드립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 '옥수수 5만t 제안했

는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또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해답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5만t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물론 박선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여당 위원인 저도 궁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수수 5만t에 대해서는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 주십시오. 그게 정부의 기본원칙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설을 늘어놓으니까 정부의 정책이 강경하다, 원칙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 기존에 약속한 옥수수 5만t 지원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알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비전이 아닙니다. 정부가 할 일은 대통령의 비전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북한이나 야당으로부터 정책 공격의, 비판의 빌미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 드립니다.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의 활동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성관광 중단했고 이미 여러 가지 군사실무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원색적인 용어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도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비 태세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대비 태세를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채택할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의 군사 대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鄭玉任 委員 원칙적인 답변, 이미 들었으니까 이렇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북한 핵 실험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 이후에 우리의 대북 억지 능력, 신속 대응 능력 또 정찰이라든지 정보 탐지 능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억지 차원에서의 정밀 타격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여 만일 그것을 전력화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겁니다.

○鄭玉任 委員 지금 국방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 왔는지를 정리를 하셨습니다. 특히 잠수함 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했는데 북한이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유감 표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鄭玉任 委員 바로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요.

1996년 잠수함 사건 때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에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

○鄭玉任 委員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환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1994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네바 합의로서 이끌어 냈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급부로서 경수로 지원을 국제사회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70%의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잠수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김영삼 정부는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 회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경수로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버텼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북한의 유감 표명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환기시키는 이유는 결국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

원으로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대한민국 내의 한목소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이런 식의 강경책을 쓰는 배후에는 남남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서 남남갈등이 더 확대되는 이 비극적인 현상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어떤 생각이신지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답변을 드릴까요?

○鄭玉任 委員 예.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존경하는 정옥임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남갈등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국론 분열이 생겨도 안 되고.

제가 사실 외통위라든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의하실 때 가끔 모호하게 답변하기도 하고 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릴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부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기회에……

○委員長 李龍三 더 하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답변을 드릴까요?

○委員長 李龍三 마무리하세요. 답변하세요.

○鄭玉任 委員 저도 마무리해야 되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김하중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면 제가 먼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핵 문제라든지 대한민국의 국방, 방위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것은 정치와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 원칙—절대로 정치라든지 다른 문제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과 함께 유연성을 보인다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국의 경제 문제 또 현상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로 마치 북한의 볼모처럼 끌려다니는 유화 정책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함께 유연성이 견지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선숙 위원님께서 '비핵·개방·3000'에 대해서 중국이 동의하느냐를 질의하셨는데 중국의 동의 여부가 왜 중요합니까? 자주적으로 우리 대북 정책 펴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음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은 1년 이상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햇볕 정책에 대해서 아무 소리가 없었던 것이지 정권 초반 1년 동안은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길들이려 하는 이러한 행태는 계속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박선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가 먼저 좀 답변드릴까요?

○委員長 李龍三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이명박 대통령님의 대북 정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역대 대통령께서 다 그러셨지만, 어떻게든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통일의 중요한 기초를 닦으시기를 아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도와주고 또 북한이 뭐라고 심하게 얘기를 해도 좀 참고 그러면서 대화에 나와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유독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만을 지정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대통령께서 뭘 잘못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자기네가 생각해 놓은 대로 우리 국내에서 그런 여론이 일어

나고 있고 아까 정옥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적인 문제는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로서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고, 이렇게 12월 1일 조치 같은 차단 조치가 상응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시지만 또 더 많은 분들은 지금 무슨 식량을 주느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식량 문제에 대한 원칙을 지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참작을 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지요.

○鄭玉任 委員 먼저 의사진행발언 듣고 순서대로……

○委員長 李龍三 마무리하셨어요?

○박선숙 위원 아까 마무리를 먼저 하신다고 그랬어요.

○委員長 李龍三 아, 그런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신각수 2차관님이 법사위에서 해외이주법 논의가 있대요. 그래서 잠깐 갔다 오신답니다.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지금 갔었는데 바로 정회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아, 그렇습니까? 갔다 오신 거예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委員長 李龍三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질의하실 분이 네 분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중단하면 오후 속개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네 분 다 질의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박선숙 위원님, 간단히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박선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일단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께서 저의 발언을 실명 거론하며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기에……

국회에서의 발언은 동등한 입법기관으로서 여기가 무슨 TV 토론장도 아니고 저의 발언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부 부처가 답변 과정에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관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외교부차관께 왜 중국에 관해서 질의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6자 회담의 의장국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전략적 관계로 발전했고, 남북 관계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점에서도 중국은 북·중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표방해 왔습니다.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그야말로 전략적 동맹국 관계라고 한다면 최소한 지지는 표명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 표현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는 제가 적절하게 지적했고, 그것에 관해서 달리 외교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외교부에서 답변할 몫입니다.

이상입니다.

○鄭玉任 委員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예, 간단히 좀 해 주세요.

○鄭玉任 委員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답변을 하셨듯이 질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질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아마 의사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통일부장관께서 인도주의적 지원의 국민 여론을 들어 봐야 된다고 하셨는

데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 인민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은 맞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북한 독재 정권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식량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이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권영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예.

두 분 이해는 다 하신 거지요?

○박선숙 위원 아니, 유감 표명에 대해서……

○委員長 李龍三 유감 표명도 적절히 답변하신 것 같아서……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영길 위원 이것은 질의를 통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께서 조금 전에 길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못한 게 하나도 없다, 전부 잘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비방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다수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 놀아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북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장관께서 남북 관계·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북측에 동조하고 있다, 다 잘하고 있는데 북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국민 절대다수를 모독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委員長 李龍三 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주성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잠깐요, 간단히 해 주세요.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신상발언이라면 받아줄 만합니다.

또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본질의 시간에 장관을 상대로 할 이야기이고, 그것을 위원장에게 처리를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의사진행발언으로서는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영길 위원님께서 아직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처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龍三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예.

○박선숙 위원 제가 잘못 배운 건가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법기관으로서 다른 입법기관이 한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마치 토론을 벌이듯이 인용하여 그 뜻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논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고……

○委員長 李龍三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박선숙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옥임 위원님의 답변은 질의시간이 짧으니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유감의 뜻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서 '두 분 다 동의가 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정옥임 위원님, 그런 취지였지요?

○鄭玉任 委員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취지는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 대신해서 나오신 차관께서는 과연 우리의 자주적인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의를 한다는 취지에서, 그러나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각 입법기관이신 국회의원들께서 한 질의에 대해서 내가 그 정도의 질의도 할 수 없는 것이 국회규칙인지의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것을 질의 드립니다.

○委員長 李龍三 그런 내용을 국회규칙에 담거나 정해 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양해가 되신다면 양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굳이 따지고 싶다면 따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영길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

는 본질의에 하셔도 또 시간이 모자라시면 보충질의 시간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일부장관이 답변을 명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도 지금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겠는데 혹여라도 조금 듣기가 뭐한 내용이 있었다면 이 다음 답변하실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고요.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길 위원 저는 오래전부터 '평화 통일은 밥이다. 평화 통일은 경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념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동의를 합니다.

○권영길 위원 그다음, 지금 남북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과거 정권의 NSC 같은 성격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런 기능입니다.

○권영길 위원 주된 책임은 통일부장관이 갖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누구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권영길 위원 외교통상부장관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길 위원 우선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남북 간에 지금 대화 채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길 위원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길 위원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면 남북관계를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위기는 아니지만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위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영길 위원 위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길 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기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대로 가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평화와 통일이 밥이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11월 1일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월 12일,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월 16일,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으로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다라고 하신 것도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의 통일을 위한 것입니까? 그 경로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이라는 것은 저희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민족통일방안에 나와 있는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11월 16일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신 것 사실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는 신문에서만 그렇게 봤는데요. 그 상황은 아마 대통령께 누가……

○권영길 위원 아니, 대통령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설하시면서 하신 거였어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누가 대통령님께 그렇게 질문을,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남한테 전해 듣기는 '글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권영길 위원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외교안전보장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제 본인……

○권영길 위원 아니, 사실 여부만 지금 말씀을 하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니, 말씀드리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나중에 다 답변……

○권영길 위원 아니, 정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정리된 것…… 저희는 흡수통일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권영길 위원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길 위원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씀을 그 후에도 대통령께서 하셨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글쎄요, 그것을 지금 대화가 안 되……

○권영길 위원 그러면 기다리는 게……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이 바뀌어라, 그러면 지원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통일부장관께서도 북한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 나와서 대화하면 풀린다고 했습니다. 이것 마찬가지 맥락이거든요, 북한이 바뀌어라 하는 것.

북한이 뭘 바꿔야 되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는……

○권영길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 위원 언젠가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길 위원 이 점이 바로 저는 안일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다시 바꾸어서 묻겠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6·15 선언, 10·4 선언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는 그 합의된 정신은 인정합니다.

○권영길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합의된 정신은 인정합니다.

○권영길 위원 합의된 정신은 뭐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과거에 남북 간에는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의 정신은 남북관계가 발전되어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와서 평화통일의 어떤 기반을 쌓는다는 것이 합의의 정신입니다.

○권영길 위원 대통령께서 국회 내의 연설에서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 선언,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했거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 답을 북측은 받아서 '혼탕'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인정 여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표명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안 하면 그쪽은 말하자면 태도의 변화를, 안 바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갈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왜냐하면 과거의 합의가 6·15, 10·4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권영길 위원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묻는 데 대해서……이 현재의 기조대로 계속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가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현 상황에서는 갑니다.

○권영길 위원 가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화의 재개, 없다고 보고 있고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까지도 각오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영길 위원 생각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2단계로 가면 개성공단도 완전히 폐쇄될 각오까지도 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각오는 아니고 저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기대만 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지요.

○권영길 위원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저희가……

○권영길 위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북측에서는 핵심적으로 짚거든요.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이게 없는 한 바뀌어질 수 없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단계 조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2단계 조처를 각오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존경하는 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지만……

○권영길 위원 아니, 설명은 충분히…… 2단계 조처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 각오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2단계 폐쇄조치 말씀이십니까?

○권영길 위원 예.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니, 북한이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가 각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영길 위원 아까 여러 차례 유엔 결의안, 대북인권결의안 이야기했습니다.

외통부장관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통일부장관께 왜…… 정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길 위원 왜 북한에서 반발하는가는 정부에서 잘 알고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길 위원 이 문제가 부시 정권 때 바로 민주주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 바꾸겠다 했습니다. 군사력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외교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것이 변환외교라는 정책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통일, 즉 흡수통일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바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자, 아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인권결의안 찬성·반대 분포가 어떻게 되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

○권영길 위원 반대 24, 기권 62입니다, 찬성 95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공동 발의했는데 반대가 스물네 나라고 기권이 62, 기권도 동의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유엔 결의서에. 거의 반 수 이상이 이렇게 가는 것을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점 때문에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권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아니, 아까 답변되었고, 실제적으로 북한이 되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아니, 지금 해석하시는 데 조금 저희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이다음에 듣기로 하고, 국방장관께 제가 좀……

개념 5029를 작계 5029로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군사계획에 관하여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과거에 개념계획이니 작전계획이니 5029니 이런 논의가 공개적으로 논의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제가 국방장관이 되어서는 군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PSI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PSI는 저희 외교 쪽에서 하여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풀 스케일(full scale) 참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평택기지에 관해서 지난번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1면에 미군기지가 지금 지하벙커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대비한 것이다, 3개월인가 견디고 그동안에 지상전이 일어나면 지상의 한국군, 미군 전부 전멸하는 것을 각오하고 있다 하는 기사, 보도가 났는데 그 기사 진위 여부를 한번 확인하셨습니

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것은 정확한 보도가 아닙니다.

○권영길 위원 정확한 보도는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궁극적으로 여기서 부인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흡수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북인권결의안도 그런 면이고, 정부에서는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련의 정책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바로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저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평화와 통일이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는데, 지금 경제 살리자고 하고 있는데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붕괴되는 속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정부의 결단을, 용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위원장님, 답변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委員長 李龍三 권 위원님, 답변받으시겠어요?

○권영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설명을 지금 하시겠다는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은 안 하고 설명만 했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예, 알겠습니다.

다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서울 노원을의 권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장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조언할 것은 조언하지만 답변을 듣는 것이 저희는 또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세 분 장관님 아까 제 앞에 하셨던 위원님들 질의에 좀 보충해서, 미진한 게 있으면 우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 못 하신 것, 하고 싶은데 못 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우선 하시라고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흡수통일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나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또 인권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정권이 출발하면서 핵 문제 해결과 인권에 중점을 두겠다고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제가 인권결의안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별 인권결의안은 세 나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미얀마, 이란.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숫자를 보면 북한에 대해서 90여 개국이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70개국 밑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높고 기권이나 반대국가들은 대부분 개도국입니다.

개도국은 국별 인권결의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지 인권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통일방안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상생공영정책입니다.

○권영진 위원 그것은 정책이지요. 통일방안을 표명하신 것은 없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저희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과거 6공화국 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었고 그 이후에 문민정부 들어와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큰 줄기는 같은데 조금씩 변화되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정부부터는 통일방안보다는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자유·민주·복지 그런 것입니다.

○권영진 위원 자유·민주·인권·행복 이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맞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공화국 정부에서 남북관계 대화가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되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진 위원 남북기본합의서가 언제 채택되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92년입니다.

○권영진 위원 91년 말에 합의해서 92년도에 발효되었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발효가 되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게 6공화국 정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진 위원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 내부에서 북한을 굉장히 비합리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보진영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또 아주 보수진영에서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몰아붙이면 전쟁을 불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북한을 죽 보면 북한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을 계속해 왔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밖으로는 살인마 정권이라고 얘기했던 5공 정권과도 대화하고 수해물자 교환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진 위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표방하는 6공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여기도 다 대화하고 교류·협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표방하는 대북정책과 실제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 가는 부분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가 통일에 대한 긴 철학과 청사진을 가지지 않고 남북 관계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 우리의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이냐를 그림 그리고 하는 문제가 남북 관계에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에 대한 청사진 그림, 그것을 통한 국민적 합의는 영원히 못 가지고 그냥 상황에 이끌리는 남북 관계, 대북정책만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러한 통일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 거기에 따른 원칙과 전략을 잘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부족해요. 이 정부 들어와서 인도주의적인 문제는 사실 그동안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군사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하고 관계없이 계속 일관되게 지원해 온다는 게 우리 내부의 큰 컨센서스 아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인도주의적 지원도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라고 쓸데없는 사족의 원칙을 정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혀 놓은 거예요.

지금 북한이 요청하면 주겠다는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니, 그것은 저희가 대북지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인도적인 지원은 조건이 없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대량 지원의 경우에는 북한이 요청하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혼합이 됐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장관님, 자꾸 보도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진짜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 대북정책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했던 것은 없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남북 관계 단절 국면을 초래한 것은 없는가를 우리 나름대로 자기 반성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짚어 보세요.

그것을 지금 보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계속 넘어간다면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건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남북 관계 상황이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북한의 지금 현재의 상

황, 그리고 주변 관계 여건들을 보면 언제쯤이면 어떤 조건하에서 풀려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전망은 가지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거야 제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것은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통일·외교·안보 라인에서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설득이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난 정부와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도 있고 차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우리 남쪽 내부의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전문가 회의나 국제 관계를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고리를 가지고 어떤 레버리지를 가지고 남북 관계 상황 부분들을 끌고나갈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비판들이 기다리는 것 아니냐, 또 북한이 추가적으로, 사실은 단계적으로 남북 간에 긴장을 높여 가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국내적인 여론의 지형이 바뀔 경우에 우리 정책 스탠스(stance)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설명을 하거나 우리 정책을 또 급선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명박 정부 내에서 북한 상황, 그리고 남북 관계, 주변 관계들, 그리고 우리 내부 문제를 들여다보는 대북정책의 로드맵을 이제는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남북 관계에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인내인데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북한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우리들 상식으로 접근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체제나 사유양식이나 그리고 북한 체제가 존립하고 있는 기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변화와 태도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평화적으로 끌고 가고 통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내부에서 남북 관계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인내가,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가려면 국민적 설득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짚으면, 저희들이 남북 관계가 처해져 있는 게…… 물론 당사자 해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한 상황으로 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당사자 해결을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남북 관계는 굉장히 긴장, 화해협력 국면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인 틀 속에서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과거에 제가 볼 때는 북방정책이 굉장히 잘 짜여진 정책이었다고 봐요. 그때 6공화국 정부 말기에 보면 남쪽이 서울에서 바로 평양으로 갈 수 없다면 우리는 동경과 워싱턴을 거쳐서 평양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북한도 바로 평양에서 서울로 올 수 없다면 모스크바와 동경을 거쳐서 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한·중수교, 그리고 한·소수교 다 된 상황인데 북한은 아직 그런 주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건대 이명박 정부가 과감하게 미·북수교, 일·북수교의 길을 터주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답변을 좀 드릴까요?

○委員長 李龍三 답변을 들으시겠어요?

○권영진 위원 예, 짧게……

○委員長 李龍三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로드맵 문제라든지 인내의 문제라든지 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든지 또 앞으로 저희가 남북 관계, 국제 관계를 잘 조화

롭게 해서 선순환 쪽으로 끌어가라는 말씀이라든지 저희가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로서는 '비행·개방·3000'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개방 중에는 대내적인 개방도 있지만 대외적인 개방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와서 미·북 관계도 개선이 되고 일·북 관계도 개선이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신 차관님께……

우리가 남북한 간의 10·4선언 이행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그렇게 물었어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아니, 제가 답변할……

○주성영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10·4선언에 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도 입장을 밝히셨듯이 10·4선언 자체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저희가 제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것은 북한 측에서 대화에 응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성영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10·4선언은 왜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우선 그 사업이 40억의 사업인데요.

○주성영 위원 비용 문제가 나는 크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작년에 국민의 정부가 10·4선언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당시에 통일부에서 추산을 해 봤는데 한 14조 3000억 원이 든다고……

○주성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 정부 10년 동안 민간하고 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해 준 액수가 한 14조 원쯤 된다면서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뭐, 그렇게까지…… 그것은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7조라고도 하고 8조……

○주성영 위원 대체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14조 원쯤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4선언 이행하는 데 14조 원 든다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그 감당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얘기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을 가지고……

○통일부장관 김하중 그렇게 수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주성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북한에서 전부 다들 염려가 없어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주성영 위원 염려가 충분히 있어요. 북한에서 닫는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아직……

○주성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좀 명쾌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임진각에서 벌어진 대북 전단 문제, 그 장소가 질서유지권의 권한과 의무가 경찰에 있습니까, 군에 있는 지역입니까?

○통일부장관 김하중 경찰입니다.

○주성영 위원 경찰에 있는 지역이지요.

제가 그 보도 내용을 뉴스에서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봤는데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운동연합 쪽과 또 납북자가족모임 한 10명 안쪽에서 가서 그것을 뿌리려고 하는데 수십 명의 진보 쪽 사람들이 가서 완력을 써서 제지시켜서 10만 장 가운데 1만 장만 날리고 나머지는 땅에 다 널브러져 있는 보도 사진을 봤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일이 흔히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통일부장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나 한 사람의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대한민국 천지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정부 쪽에서 논평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저희가 계속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나와서 설명하고……

○주성영 위원 뭔가 질서 있는 가운데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처벌하고 또 잘못된 점이 없으면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제가 이제 국방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햇볕정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예.

○주성영 위원 그 실체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장관님 나름대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장관님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정책의 의도와 결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햇볕정책도 그 의도는 '햇볕'이 얘기하듯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 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그렇게 하여 상호 평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이 '햇볕'이라는 말 속에 있듯이 이것은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까 제가 죽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사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주성영 위원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지고 물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체적으로 참 부합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 법사위원회, 버스 두 대를 이끌고 개성공단에 가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햇볕정책은 역사의 정방향에 서 있다", 공개적으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지금 국회의원회관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벽보에 '신자유주의의 몰락' 이런 데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습디다.

우리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가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또 케인즈주의가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한 것처럼 햇볕정책도 분명히 지난 10년간 실체가 있는 정책이었어요.

햇볕정책이 왜 실패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햇볕정책은, 뭐 부수기라고 표현도 하지만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의존도를 높게 만들어서 개방으로 유도한다……

대남 의존도를 높인다는 데 대해서는 성공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지금 선뜻 3만 5000명의 북한측 근로자들 생각 때문에 개성공단의 문을 쉽게 못 닫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남쪽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남 의존도를 높인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성공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방으로 유도됐느냐? 오늘 국방부장관께서 남북한 군사 분야 합의 및 이행 현황을 남북 기본합의서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부터 죽 이렇게 명기를 해서 보기 좋게 해 놓으셨습니다. 북한은 이 결과 끝에 핵실험으로서 명확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했어요, 숱한 도발 이외에도.

그런데 햇볕정책이 처음에 설계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또 벌어진 겁니다. 햇볕정책이 처음 설계될 당시에는 끝에 가서 북한이 남한의 의도대로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으나 처음에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남남갈등입니다. 햇볕정책이 10년 동안 진행되면서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남남갈등 문제가 국론 분열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증좌라고 봅니다.

처음에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추진했지만 며칠 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 '남북문제 경색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파탄을 가지고 왔다, 민주연대를 결성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실 때 그분의 위치는 계파의, 갈등의 한 분파의 리더로서 자신을 격하시킨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햇볕정책은 10년 동안 역할을 했지만 남남갈등이라는, 국론 분열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추진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그 하나의 계파, 진보좌파의 리더 자리로 물러섬으로써 실패한 거예요.

제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오늘 여기 외통부 차관님 비롯해서 통일부장관님, 국방부장관님이 와 계십니다. 이제 '비핵·개방·3000', 북한에서는 비핵은 좋다, 동의한다, 개방·3000은 자존심 상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내놓았어요. 좋습니다. 상생과 공영이면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저쪽에서 남한의 10·4 선언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도 저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원칙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실천하고 행동해야 국민들이 안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갈라진, 오늘 이 국회에서도 여실히 드

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남갈등의, 그리고 그 세력은 어느 것이 우리 헌법에 맞는 거냐, 국가 발전에 맞는 것이냐 하는 담대한 계획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김하중 지금 존경하는 주성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핵 문제, 앞으로 저희가 목표로 삼는 데 있어서 북한 핵 문제와 이제까지 있었던 남북관계의 양적인 변화를 이제 좀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남북한이 이제는 상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협력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겠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북한의 지지도 받고 이래 가지고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틀림없이 확고한 원칙을 갖고 의연하게 해 나가면서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아주 명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항상 북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하시지 않게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성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길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내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외교차관께서 유엔이 결의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사실관계를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미얀마, 북한 또 이란, 세 나라라고 그랬지요? 여기 인권결의안에 세 나라가 함께 포함된 겁니까, 독립적으로 됐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독립적인 결의안입니다.

○권영길 위원 독립적으로 됐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권영길 위원 그리고 그 독립적인 결의안에 우리가 발의국이지요? 발의했잖아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저희가 공동 제안국이 된 거는……

○권영길 위원 어쨌든 사실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북한하고 미얀마 2개국 결의안입니다.

○권영길 위원 공동 제안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미얀마도 있고 한 거는 유엔의 결의 자체도 독립적이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미얀마도 인권결의안을 촉구했겠지만 북한인권결의는 독립적으로 하나로 올라간 거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 독립적인 결의에 우리가 공동발의를 한 거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제안국입니다.

○권영길 위원 제안국……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권영길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24, 기권 62, 찬성 95, 그거는 숫자는 확인해 보면 맞을 겁니다. 저도 다시 확인해야 되지만 그 숫자는 맞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권영길 위원 바로 그런데 미얀마도 있고 이란도 있고, 했다는 것하고 북한인권결의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요……

○권영길 위원 아니, 제가 다시 질의하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천…… 지난번 걸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결의한 내용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그전 것을 가지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어떤 문제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신 차관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개도국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하고 연결이 안 되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번 결의안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전부 열거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권영길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아까 개도국하고 인권 현황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부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아니요, 해석이 아니고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 국별 인권결의안이라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특정한 국가를 꼬집어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반대 24표, 기권 62표라는 거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국별 인권결의안을 하는 데 대한 반대에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영길 위원 더 따지고 싶지 않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립적으로 안건이 올라갔고, 지금 신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죽 되어 있고…… 그것은 정부 해석이라고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지난번에는 그러면 공동 제안은 고사하고 기권은 왜 했겠느냐 이거지요. 북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이번에도 통과되고 나서 북측에서 나온 성명서 봤습니까,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권영길 위원 봤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봤습니다.

○권영길 위원 뭐라고 그랬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통일부장관께서는 봤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권영길 위원 상종을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번 결의안 통과되고 나서 상종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대화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김하중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바로 지난번 미국 부시 정권 때의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북한 체제 붕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정부는 신중치 못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숙 위원 국방부장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지, 대화가 상당히 교착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오시라크 옵션을 포함한 정밀타격 등의 군사적 제재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상희 현재는 그런 방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현재도 물론이고 과거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그것이 가져올 상대방의 재차 보복 공격에 의한 우리 측의 피해, 혹은 주한미군의 피해를 감안해서 94년 당시에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이 반대했던 안이지요.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가 포기했던 안이고요.

부시 행정부의…… 외교부차관님과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2001년 이후 2006년 10월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까지 5년 이상을 북한에 대해서 취해 온 압박정책 혹은 강박정책(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강박정책)이 왜 대화와 타협의 정책으로 변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제가 알기로는 6자회담이라는 틀이 생기면서 그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입장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런 답변이 적합하지 않고요. 6자회담은 강박정책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펴고 있는 동안에, 양자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동안에도 2003년 이후에 2006년까지 계속되었지만, 그래서 2005년 9·19 합의까지 이루어냈지만 핵실험 못 막았지요. 핵실험을 못 막은 부시 행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수단은 대화와 타협밖에 없었던 겁니다.

앞으로 앞에 제가 국방부장관께 질의 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을 검토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93년 1차 핵위기로부터 2차 핵위기의 경험의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혹은 북한에 대하여 주변국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통일부장관님께서는 제가 이미 제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

를 표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편에는 이 헌재 전 경제부총리께서 이대로 상황을 방치하면 남대문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해서 대형 참사를 불러 일으킨 것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황을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두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황을 관리할 책임은 지금 현재의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굳이 은퇴하신 전직 대통령께서, 혹은 전직 경제부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그런 걱정들을, 오죽하면 그런 말들을 하고 나서셨겠느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이 큽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관리하고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 주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미 지난 10개월간,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었던 일을 안 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운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정말 숙의하셔서 지금 필요한 일들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龍三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길 위원 위원장님, 회의 정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예, 말씀하세요.

○권영길 위원 저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보면서 정말로 참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남북관계위원회 회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정부 측의 답변을 저는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리 위원회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부 측 질의·답변을 통하고 끝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 측에서는 회의 상황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심각하게 보지 않고 위기가 아니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위기라는 용어가 적합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위한 어떤 촉구결의안 같은 것이라든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결의안은 합의가 되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 한쪽의 주장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과 또 야당 측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고민, 그 끝에 어떤 합의가 도출될 수 있으면 정말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한번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교통상위원회도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히려 남북관계위원회에서 그것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龍三 그렇지 않아도 남북특위 2차 회의를 준비하면서 남북특위에서 대정부·대북촉구결의안을 합의해서 본회의에 내 볼까 하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남북 특히 북한에서 남한에 하는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태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남쪽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 시각차가 커서 이번 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촉구결의안 등 여야가 합의해서 내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야 간사 간에 또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대정부 또는 대북촉구결의안이 적절한 수위에서 합의가 되면 우리 특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송민순·권영세 위원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거나 또는 가시는 바람에 서면질의를 하셨는데 서면질의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질의 및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도 해 주시고 또 남북

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는 많은 대안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현재 남북관계는 위기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위기라고 보는 시각도 또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여러 의견들을 정부정책에 적극 수용해 주시고 또 남북문제 해결에 현명하게 대응을,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 장관님 그리고 신각수 차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영우
김창수 문학진 박선숙 송민순
송영선 이범관 이용삼 정옥임
주성영 황진하

○출장 위원(1인)

권영세

○청가 위원(2인)

김장수 홍정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전문위원 지성배

○정부측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제2차관	신각수
기획조정실장	임재홍
평화외교기획단장	허철

통일부

장관	김하중
기획조정실장	김중태
통일정책국장	김천식
남북교류협력국장	황부기
인도협력국장	천해성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김영탁

국방부

장관	이상희
정책기획관	권오성
기획조정관	김형기
군사정보부장	김왕구
작전부장	이성호
군비통제차장	문성묵